

도 넘은 검찰·법원의 무력화,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입장을 표명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권력 줄세우기 완결판으로서 검찰조직이 앞으로는 오로지 정권에 충성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겠다는 독직폭행으로 감찰 대상이자 피의자가 된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심지어 인터넷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대구의 검사도 영전했다. 반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라임 펀드 사건 등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교체됐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반복되는 검찰총장 무력화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 학살로 검찰은 이제 상전인 공수처를 머리에 이고 정권 행동대인 경찰 뒤치다꺼리나 하는 집단으로 전락하였다. 자긍심을 잃은 검사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과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의 개별적인 의사 표시를 넘어 국회의원과 총리·법무부 장관까지 판사를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이원욱 의원은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부른다”며 막말을 했다.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 이름을 따 ‘○○○ 금지법’까지 발의해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잘못된 집회 허가로 (방역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소규모 교회 모임을 성급히 풀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광복절 연휴에 놀러 가라고 부추긴 정부의 방역 실패의 책임을 모두 법원에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사법 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언급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준사법권인 검찰의 독립은 사법개혁의 정수다. 민주화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지금처럼 검찰조직을 난도질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이 아무리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도 자신을 포함한 정권의 비리를 덮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검찰인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나아가 법원의 독립성을 대놓고 침해한 총리와 법무장관을 방임해서도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사법농단을 구실로 검찰수사를 불러들여 사법부 위기를 초래했지만 이번에도 사법권 침해를 용인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일이다.

2020. 8.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